‘악취 아우성’ 이제야 들리나…남구, SRF 운영업체 고발

기준치 잇단 초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1차 사전경고 처분도
광주시도 뒤늦게 대응책 마련 나서…강기정 시장 오늘 주민 간담회

광주시 남구가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설 내 악취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광주일보 11·13일 6면>에서다.

광주시도 뒤늦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SRF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3년 넘게 지속됐는데도 악취 측정을 미루면서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 측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남구는 13일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인 ‘청정빛고을’을 남부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RF 시설에서 지난 6월 12~13일과 지난 7, 8일 세 차례 진행한 오염도 검사 결과, 복합악취가 모두 법적 기준치(배출구 희석배수 500)를 초과한 수치(669)가 측정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남구 고발 사유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13조 2)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돼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고발과 별개로 지난 12일 SRF 시설물에 대해 1차 사전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 진술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시 악취 측정을 실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2차 행정조치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경우 광주시 내 5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단독결정만으로는 가동을 중단하기 어렵고 개선명령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남구는 그러나 주민들 민원이 쇄도한데다,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 측정이 이뤄진 만큼 적극적인 행정 제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한 발 늦은 행정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남구는 지난 6월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 측정치를 확인한 뒤 개선계획안을 제출받은 바 있다.

광주시도 뒤늦게 SRF 시설의 악취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10시 해당 시설을 찾아 장비 등을 둘러보고 10시 30분부터 주민들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금타 화재공장 해체 돌입…18일부터 합동감식

화재 3개월…원인 조사 한계 예상

금호타이어 공장이 화재가 난 지 3개월 만에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13일 광주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소방·국과수가 시행하는 합동감식을 위해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2공장 정련동 해제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해체 작업은 지난 12일 광주공장 2공장인 정련공정 건물(3층 규모)에 대한 광주 광산구의 해체 착공 신고가 승인되면서 진행됐다.

당국은 합동감식의 경우 날씨 등 여건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고 폭염과 폭우 등이 잇따라 발생해 현장 화재 원인 조사에 한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발화지점이 있는 부분의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추가 붕괴위험도 높아 건물 내 마이크로오븐을 통째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현장에서 빼내 감식을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조금씩 구조물을 파괴하면서 스카이 고소차, 드론 등을 활용해 육안검사 등을 병행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감식은 전기시설을 회수해 단락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초 발원지로 추정되는 5t짜리 마이크로오븐 내부 불순물 여부 등을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쓰레기 소각장 설명회, 주민 반발로 또 무산

삼도동 주민들 행사장 진입 막아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명회<광주일보 6월 27일 6면>가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2시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쓰레기 소각장 부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삼도동 주민들 50여 명은 이날 낮 12시부터 설명회가 열리는 2층 계단과 복도를 막고 행사장 진입을 막았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소각장 결사반대’ 등이 써진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수백 t 의 쓰레기를 태운다는데 어떻게 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46년째 삼도동에서 거주하는 나명주(여·70)씨는 “주민들이 모두 농사를 짓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누가 우리 농산물을 사 먹겠나. 생계가 끊기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린 함평군 주민 50여명도 반대에 나섰다.

광주시 측은 설명회장 진입이 불가능하자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위장전입 등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며 충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람·공고로도 갈음이 가능하다”며 “3차 설명회 개최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일일 650 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을 계획했다. 지난 6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위장전입 논란 등 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릴 행사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

고흥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 2명 감전사
수중 모터 전기 차단 않은 채 작업한 듯

전남경찰청, 관리 소홀 조사

고흥군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중 모터의 관리소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고흥군 두원면 새우양식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실시, 수중 모터 내부 전선에서 누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식장에서는 청소를 위해 모든 물을 빼내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으로, 작업 막바지 무렵 부유물과 찌꺼기 때문에 정화조에 물이 차오르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감전됐다.

A씨를 구조하려고 뛰어든 태국 국적 20대 근로자 B씨도 감전돼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업주가 수중 모터가 누전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했는지, 수중 모터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정화조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 작업 방식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복절 폭주족 집중 단속

전남경찰, 인력·장비 최대한 동원

전남경찰청은 광복절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 등 난폭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112 신고와 온라인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파악해 집중 순찰,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현충일 폭주족 단속으로 순천시 일대에서 폭주 행위에 가담한 일당 1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총경 이상 경찰관 마약 검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